

시장경제의 복수

김이석(시장경제제도 연구소장/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

○ 제목에 대하여

- 시장경제는 의지를 지닌 인간과 같은 실체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지향적 주체가 아님. 그런 점에서 원래는 '**치명적 자만이란 이름의 시장에 대한 무지와 불신**'으로 잡았다가 '시장경제의 복수'란 제목으로 다시 잡음.
- 원래 제목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통제와 입법으로 원래 의도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통제주의적 경제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였음.
- 그러나 '시장경제의 복수'는 목적지향적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장일 뿐임.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무시할 때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드러내기에는 좋아서 그렇게 잡았음.

시장=가격(Incentive & Information) + 법·제도

- Incentive
- 영국에서 호주로의 죄수 호송:
- 대다수 사망
- 맞고 할래, 그냥 할래?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프란츠 오펜하이머/ 경제적 수단 vs 정치적 수단

일

vs

강탈

"There are two fundamentally opposed means whereby man, requiring sustenance, is impelled to obtain the necessary means for satisfying his desires. These are work and robbery, one's own labor and the forcible appropriation of the labor of others."
~ Franz Oppenheimer



교환과 약탈(시장경제의 '도덕적 우위')

- 사람들은 생산(과 교환)을 통해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함. 교환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이지만 그 이면에는 재산권의 교환이 동시에 발생함.
 - 경제적 자유란 재산 소유자가 사용, 수익, 처분에서 그의 자유로운 의사가 보장되는 상태를 지칭. 그래서 경제적 자유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란 말과 다르지 않음.
 - 자신의 삶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획득하는 방식에 있어, 이런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는 생산(과 교환)이 그런 방식인 데 비해 이런 자유가 억압되거나 박탈된 사회에서는 생산이 아니라 '약탈'(법적 약탈)이 주된 방법임. (오픈하이머, 국가)
- 그런 점에서 생산이 위주인 시장경제는 '도덕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회에 비해 우월

Incentive yet no Information: Information

- 아들의 아픔을 없애려는 천부적 ‘동기 부여’
- 동기부여로 충분?
- Know-what, know-how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정보’는?
- 가시가 넘어갔지만 목에 계속 걸렸다고 여기고 죽을 듯 울부짖는 아이



시장 가격은 '인센티브로 포장된 신호'

- 시장가격은 사회 속의 자원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
- 인센티브: 특정 지역에 금광이 발견되어 사람들이 몰리고 주택 수요가 많아지면 이 지역 주택가격이 상승함.
- 이 가격과 종전 가격의 격차가 클수록 주택을 공급해서 얻는 이윤의 크기가 더 커질 것/ 주택 공급 인센티브
- 신호: 동경에서의 지진, 도로 등의 재건 시급...재건에 필요한 자재 가격의 급등 → 시급하지 않은 건축의 보류
- 중앙 계획자 없이도 행동의 조정이 가능해짐.

시장 “가격”과 기업가정신

- 유통업의 발달 과정 / 메일 오더 → 백화점 → 쇼핑몰
- 도시화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백화점
- 모델 T와 도로의 발달 / 교외의 쇼핑몰 / 극장, 식당 쇼핑몰
- 레저와 쇼핑을 결합하려는 최근 여주 쇼핑몰
- 가격이 없다면, 소비재만 가격이 있고 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교환이 되지 않고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가격 통제 =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동기와 정보’ 둘 다 망치는 것, 기업가정신도 죽여 / 시장은 거대한 소통체계

치명적 자만

- - 멀쩡한 신호등을 고장 내는 한편, 이윤을 '공유' 하자는 주장으로 기업가적 혁신을 하려는 동기도 없애고, 이윤가능성을 간파할 신호도 왜곡
- - 이렇게 신호등을 고장을 내고도 의도하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치명적 자만'(하이에크)

자유주의시리즈 13

치명적 자만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음 신중섭 옮김

THE FATAL CONCEIT

Friedrich A. Hayek



CFE 자유기업원

사례들

- - 임대료 통제, 최저임금 통제 / 시장 간섭이 또 다른 간섭을 부르는 악순환
- '이윤 공유의 주장' / 이낙연, 김종인
-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이윤 공유' 제안에 따라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의 자발적 이익 공유 유도를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우파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에서 임금계약대로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는 보고서가 돌았다고 함.
- + 무노조 경영 삼성전자 노조의 이윤공유 주장

통계적 성과에 비례하는 서민 고통

- 비정규직 제로와 구소련의 '희생률' 제고 지시/
- '비정규직 제로' 지시에 따른 '인국공' 사태는 과거 공산체제의 구소련에서 중앙계획당국이 각 병원들에 희생률 제고 지시를 떠올리게 함./ 서울시 산하 연구원 비정규직 제로의 역설
- - 현 정부가 통계적 성과를 과시했지만, 그런 통계가 실제 현실을 반영 못한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현 정부 들어와서 특히 많았음. 대표적 사례는 '세금 일자리'

법과 도덕(성공적 규칙의 선별/ 내면화 & 규범화)

o 오스트리아학파; Menger & Mises

o Calculation Debate

-가격의 기능; **incentive & “information”**

-미제스: “병정놀이와 실제 전쟁”은 다르다.

-하이에크: **personal & tacit** 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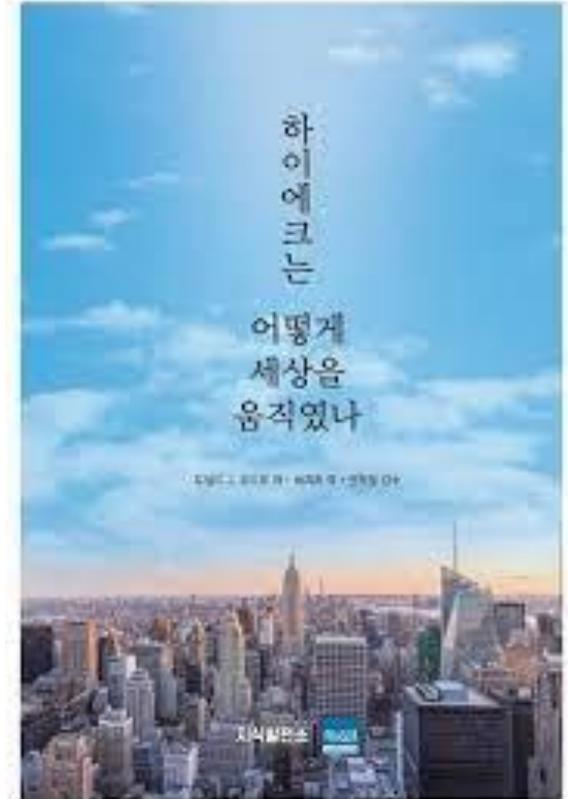
o knowledge problem: **분산된 정보, 변화하는 정보**

-시장 경쟁은 발견과정(그리고 창조과정)

o selection of rules: **문화적 진화/ 성공한 규칙의 진화**

민주주의(다수결 입법)의 제한 필요성

- 다수결로 뭐든 정한다? 다수결 원리는 권력의 원천을 설명하지만 다수결로도 변경할 수 없는 것(법) 설정해야/
- 오랜 선별을 통해 ‘발견된 법’이 가진 ‘지식(정보)’적 가치를 인정해야
- “다수의 폭정”
- 왜 자유롭게 행동하는 개인들이 공공복리를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까? 《하에 크는 어떻게...》 57~8; 남을 기쁘게 할수록 성공 & **누구도 규칙(법)을 자기하게 유리하게 변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법의 지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금감원 판정

- 회계방식들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회계방식을 둔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특정 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원장이 바뀌면서 여러 차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내렸던 판단을 손바닥 뒤집듯 반복함.
- 이런 소급적인 결정 반복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시장적인 행태임.
-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금감원의 행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게 아닌지 것으로 의심.

또 한국의 법원처럼 소위 ‘좌파’ 성향 판검사들이 ‘법의 지배’라는 개념조차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하고, 즉, 다수의 표를 확보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겠다고 나서고, 그런 입법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재판 거래’에 대한 의심까지 받는다면,

그리고 시민들이 판사의 판결이 그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믿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아직은 임계점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정된 재산권의 보호가 물 건너 가고 이에 따라 시장경제의 작동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

- 이런 일이 벌어지자 나스닥에 상장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올해 2월 국내 온라인쇼핑몰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결정을 내림.
- 이에 이것이 '탈한국'의 전조는 아닌지 우려. 쿠팡의 선택 배경에는 이런 금감원의 시장의 신뢰를 잃는 행태가 있었을 것.

- 결론적으로 경제적 자유의 억압에 따른 치명적 결과는,
 - 통계적 실적은 유지하겠지만 실제 개인들의 복지는 크게 후퇴시켰음
 - 아울러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동기나 제대로 된 신호를 가질 수 없으므로, 기업들로 하여금 탈한국을 하게 한다는 것으로 집약.

돈 풀기와 시장이자율의 왜곡

- 코로나 사태를 맞아 각국 정부는 돈 풀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벌였지만, 이는 실제 시간선호와 다르게 시장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언젠가 터질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을 조장함.
- 시장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실제 시간선호에 따라 현재의 소비를 늘리게 하는 한편, 더 먼 미래에 완성될 긴 시간이 필요한(혹은 불확실이 더 큰) 투자를 늘리게 함.
- 그 결과 중간재 생산이 어려워지는 병목현상 발생.
- 최근 미국의 자산시장에서 버블 경고음이 요란한데 물가 인플레이션 속 생산의 침체(스태그플레이션)가 일어질 수 있어 걱정을 보태고 있음

PRIVATE SPENDING

The Times Oct. 17, 1932 p.13

MONEY FOR PRODUCTIVE INVESTMENT

A COMMENT BY ECONOMISTS
TO THE EDITOR OF THE TIMES

D. H. MACGREGOR (Professor of Political Economy in the University of Oxford).

A. C. PIGOU (Professor of Political Economy in the University of Cambridge).

J. M. KEYNES.

WALTER LAYTON.

ARTHUR SALTER.

J. C. STAMP.

Letters to the Editor

The Times Oct. 19, 1932 p.10

SPENDING AND SAVING

PUBLIC WORKS FROM RATES

TO THE EDITOR OF THE TIMES

... your obedient servants,

T. E. GREGORY, Cassel Professor of Economics.

F. A. VON HAYEK, Tooke Professor of Economic Science and Statistics.

ARNOLD PLANT, Cassel Professor of Commerce.

LIONEL ROBBINS,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London, Oct. 18.

마구 돈 풀기: 재정적자를 두려워 말고 마구 돈을 풀어도 된다?”

김이석, “홍 부총리님,
모건소 장관의 고백을
아시나요?” 아시아투데이,
2020년 6월 23일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622010013687>



- 대공황 당시 모건소 재무부장관이 고백했듯이, 적자재정을 늘리고 돈을 풀었지만 경제주체들의 빚만 늘어났었음.
- 현재 한국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정부 부채까지 마구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징표는 아직 없음.
-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김재익 수석이 인기 없는 '안정화 정책'(물가를 잡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정책)을 펼쳐 나중의 한국경제 성장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음을 기억해야
-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에 더해 소비자 물가상승 압력에 떠밀려 화폐정책을 정상화시킬 때 초저금리에 따른 '과잉' '잘못된' 투자들이 정리되면 경제 작동의 기반이 만들어져

아, 대장동 게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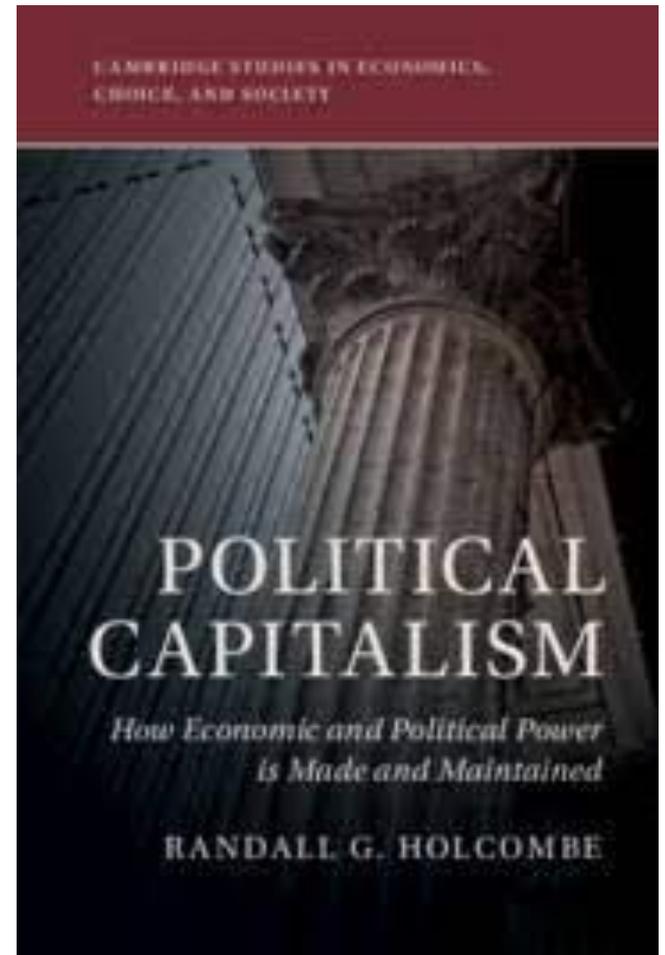
- 개인의 재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규제권력이 강할수록 부패할 가능성이 농후해짐.
- 액턴 경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 토지수용권과 같은 강력한 규제권력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속박할 뿐만 아니라 부패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
-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 무늬는 공권력을 이용한 토지의 강제수용권 발동이 이뤄진 공영개발이었지만, 실은 민간 시행사가 성남시의 토지강제수용권을 차용해서 대장동 원주민의 토지재산을 '약탈'한 것.
- 그런 "끼리끼리 특권과 반칙으로 해먹지 못하게" 하려면 그런 규제권력을 원천 봉쇄해야

시장 자본주의 vs 정치적 자본주의

김이석, “시장 자본주의와 정치적 자본주의” 아시아투데이, 입력 2019.09.16. 지면 09.17.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916010008456>

홀콤(황수연 역), 《정치적 자본주의 : 경제 및 정치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원제 : *Political Capitalism*



법의 지배 ≠ 규제 공권력을 악용한 약탈



- 어떻게 “자유의 길”
로 나아가게 할 것
인가?

- 감사합니다!